

TRADE & ORIGIN REPORT



1.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사례 모음 발간 배포
2.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상 성공적 추진
3. 산업부, 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대미 수출 통관애로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4.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5. 한-UAE, AI·원전 협력 등 MOU 7건 체결
6.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TRADE & ORIGIN 동향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사례 모음 발간 배포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발간해 배포 중이다.

이번 자료는 2025년 3월 이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를 보다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철강제품(1편), 자동차 부품(2편), 식품(3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4편) 등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 제5편은 실제 판정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 관세당국에 직접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적 규정보다 사례 기반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원산지기준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이라도, 품명·특성·용도에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었지만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된 바 있다.



사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 책자를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상 성공적 추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이 제도는 FTA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는 국제무역에서 원산지의 신뢰성과 대응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와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하고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 판정 교육, 자율점검 작성 실습, 모의 사후관리 점검 등 원산지 사후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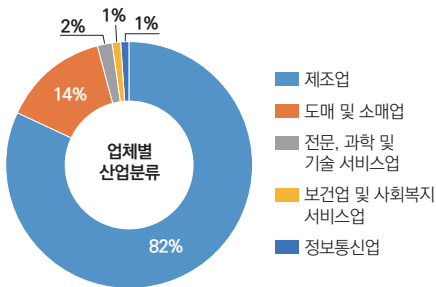
올해는 총 87개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5.3%의 기업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참여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전 점검하고 현행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참여 기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적 지원, 나아가 지원 범위 확대를 건의하며, 향후 사업의 발전과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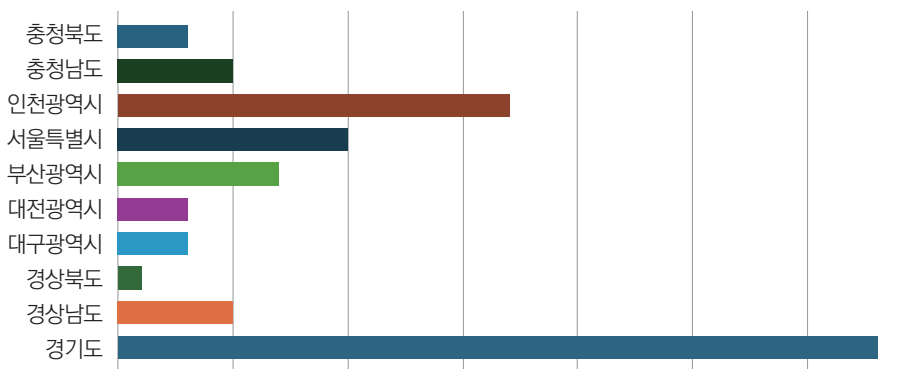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내년에도 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복잡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원산지 관련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제조업	71
도매 및 소매업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정보통신업	1

업체별 참여지역 통계



경기도	33	부산광역시	7
경상남도	5	서울특별시	10
경상북도	1	인천광역시	17
대구광역시	3	충청남도	5
대전광역시	3	충청북도	3

본 소식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지원실 이나현 원산지관리팀장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전함

산업부, 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대미 수출 통관애로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12월 1일, 미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대미 수출 통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수출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변화된 규정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이해 현황과 적용실태, 주요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비특혜 원산지기준에 대한 사례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송경은 연구기획실장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기준 사례별 접근방안’을 주제로 최신 관세부와 현황, 232조 품목 관세 범위 확대, 높은 중간재 의존도가 한국 기업의 수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산업별·사례별 비특혜 원산지 판단, 복잡한 생산공정에 따른 분쟁 가능성, 미국의 샘플링·검사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CBP E-Ruling 활용 전략, 미국의 통상·관세동향 지속 모니터링, 판정정보 제공 등 기재부·산업부·관세청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대미 수출 전반에 걸쳐 각국별로 상이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특정국의 우회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트라,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은 자사 수출 품목이 미국의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현지 시간 기준 12월 15일에 마무리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고 자국 경제에 수십억 규모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던 무관세 교역이 연장되면서 영국의 제약, 자동차 제조, 주류 및 금융 서비스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BBC News

한국과의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EU), 미국, 인도와의 협정에 이어 영국의 현 노동당 내각이 체결한 4번째 무역 협정이다. 다만 지금껏 그 어느 협정도 영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음악, 화장품, 식품 등 한국 문화와 상품의 인기는 크게 높아졌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은 당일 런던 소재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여한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협정 타결 소식을 발표했으며, 해당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성 타결<2025. 12. 16(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무역의 98%는 계속 무관세로 유지된다. 이는 EU가 한국과 맺은 조건과 동일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과 한시적으로 유지해 온 조건이기도 하다.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고, 이 협정은 2021년 발표됐다.

이 기존 무역 협정은 오는 2026년 1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새 협정으로 20억 파운드(약 4조원) 규모의 영국 수출 시장은 관세 인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한-UAE, AI·원전 협력 등 MOU 7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1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과 아크부대 파병 등 수십 년간 구축된 신뢰를 재확인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영구적·불가역적 수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80년 수교 이래 한국과 UAE는 에너지, 건설·인프라, 교역, 투자, 국방·방산, 우주, AI 등 첨단기술, 보건·의료, 농업, 교육,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바라카 원전, 아크부대 파견, 공동 위성 개발(에티하드셋·두바이셋·칼리파셋 등)은 양국 협력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UAE의 장기 국가 비전 “Centennial 2071”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본 전방위 시너지 창출에 뜻을 모았다.



사진 : 대통령실



양국은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전략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사항에는 ▲AI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글로벌 공동 진출 ▲국방 공동개발·현지생산 ▲물 기술 혁신 협력 ▲의료 R&D·K-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미래세대 교육 교류 확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UAE K-City'와 같은 상징 사업을 발굴해 중동·아프리카·유럽 공동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전담 고위인사 지정, 부처 간 고위급 교류, 양국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 설치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협력 진척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상호 신뢰 속에 미래 세대에 평화와 번영을 전하는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2025년 10월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타결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2019년에 중단된 후, 2024년 3월에 재개되어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이다. 한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RCEP(2022년 발효)을 통해 기계·가전·화장품·식품 등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민감 품목인 자동차·철강·화학 등에서 개방이 제한되어 한국 주력 수출의 실익이 작았다.

이번 양자 FTA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상향·보완형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를,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288개 품목, 말레이시아는 68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개방이 제한되었던 민감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며, 한국은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시장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도입되며,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무역, 녹색 산업 협력 분야가 신설되고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및 래칭(자유화 역진방지) 조항도 포함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말레이시아 FTA 분야별 주요 타결 내용 및 무역장벽 완화 현황〉

구분	기존 장벽 수준	완화 및 개선 내용	기대효과
상품 분야	자동차·철강·화학 등 민감 품목 중심 제한	한(94.8%)·말(92.7%) 자유화, 자동차·철강 단계적 철폐, RCEP 대비 완화된 원산지 기준(누적·CTH·중간재 포함)	교역품목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서비스 분야	포지티브 리스트, 외국인 지분 제한	네거티브 리스트 최초 도입, 전기차·부품 투자제한 철폐, ISDS·역진방지도항(래칭) 도입	시장자유화, 법적 안정성 확보
협력 분야	개별 MOU 수준 협력에 그침, 디지털무역·녹색경제·할랄 등 신통상 협력 체계 부재	디지털무역·녹색경제·할랄 산업장 신설, 데이터이전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비관세조치 협의 절차 신설	신통상분야 제도로 디지털·그린·할랄 연계 진출 기반 강화
규범·제도 분야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무역구제 등 절차상 차이 및 표준 미비	표준·인증 상호인정,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 절차 투명성 강화	예측가능성·제도신뢰성 강화

자료 : 산업통상부, 코트라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편집

이번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규범과 제도 기반을 전면 개선한 첫 양자 협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단순한 수출자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실질적·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말레이시아의 NIMP 2030(신산업기본계획 2030)과 NETR(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의 목표와 맞물려 부품조달·디지털서비스·ESG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산업통상부